

## 지방대학이 사는 길

- 정책과 의식의 전환 -

민 경 은 | 경북대 기획실장

지난 3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수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친화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의 진학모형'을 '권역별 인근 대학 중심의 진학모형'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한 후 최종 계획을 8월 말 공고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지역산업과 유리된 교육, 학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월 28일자 대통령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1학년도 대학입시 수능모의 성적 370점 이상 학생의 71.8%가 의대·법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상위 5% 이내 학생 중 인문계 97% 및 자연계 85% 이상이 서울소재 대학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은 지난 '78년 수립된 이래, 수도권의 인구 분산, 국민 교육비 부담의 비효율성 제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계속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학생 증원 억제, 지방대학 중심의 증과·증원, 시설투자 지원을 지방 국립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울지역 신설 대학의 지방 이전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 왔다. 그 결과 지방대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교수 충원율과 내부시설 등 질적 교육 여건이나 취업률은 서울소재 대학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수도권 대학 지방분교는 행정상의 비효율성은 물론 대학구성원 간의 위화감, 차별의식, 대립 감정 등에 의한 많은 교육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과도한 전공 설치와 입학생 증원으로 질적 성장에 전념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재원을 하드웨어(건물, 캠퍼스 확보 등) 투자에 소모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 분교는 물론 대도시의 위성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 학생들은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거의 매일 최소 세시간 여의 귀중한 시간을 통학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여러 차례 장관이 바뀌고 최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은 첫 단추 즉, 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교육 집중화 현상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의 인재 공동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국가가 설립한 대학마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령 인구의 감소 추이를 통해 이미 충분히 예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일부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서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IMF사태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를 놓칠 때 더 큰 위기가 닥친다거나 단순한 외형적 성장은 내실화에 엄청난 노력과 경비를 요구하게 된다는 상식을 간과한 결과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교육부가 수립중인 새로운 지방대학 육성책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10~25%로 저조하며, 행정고시 합격자는 7.1%에 지나지 않는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대학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주요 과제로는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 지역 산업·문화와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확대, 지방대의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특별 지원,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확충, 지역 내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우수 교수 유치사업 등 우수 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대학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체·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학·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현장적응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산·학·관 교육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계획수립 추진기구로서 산업계,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교육부 보도자료(2000년 3월 29일)

중전의 계획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데 비해 이번 계획은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을 향상할 목표로 하고 있어 지방인이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목표가 타당하며 방법은 적절한가? 필자는 한마디로 '입학정원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이 있기에 이유

를 간략히 논하기로 한다.

## 목표(취업률 향상)에 관하여

원론적으로 대학은 -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가 대학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지만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만 공감될 수 있다. 인적자원의 고급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의 기초가 되며, 국가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선진강대국의 정치·경제·문화적 동화정책을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생존의 차원으로 오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모두를 경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보다 많은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으로의 진입도(취업률)만이 우수 대학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로 인식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점이다. 대학과 직업학교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대학의 졸업생을 공산품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차라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재지역활당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재지역활당제는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의과대학의 정원배정은 이미 지역활당제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새교육공동체 등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범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 배경에도 인재활당제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 방법(세부대책별 특성)에 관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정의 확대 지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육성 대책들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예산의 특성상 신규 사업비의 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예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염려해야 할 부분이다. 시책의 완급(우선성)에 관한 자료는 향후 시행단계에서 공시될 것이지만, 각 대학이 전체 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의 확보 방안과 시기별 총괄 예산액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2000년도 교육부의 예산은 19조 1,720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21%에 달하였으나 초·중등 교육 혁신사업에 16조 3,782억 원, 직업교육체제 기반구축에 2,427억 원, 재외동포 지원 등에 5,282억 원이 소모된 것에 비해, 대학교육 지원자금은 말쑥 많던 BK21 사업비 2,000억 원을 포함해도 9,141억 원에 지나지 않으며, '99년 예산에 비해 563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면 약속된 자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하며 이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몇 배의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1) 획기적인 재정지원 확대

구제역의 확산시, 그리고 풍납토성의 보존을 위한 지원예산(3조, 5조)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접하고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 ‘획기적’이라면 지방대학 교육에 최소 3조원 이상이 투자될 수 있는가? 2,000억 원에 불과한 BK21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하기 비길데 없는 관리규정을 제시한 교육부가 ‘획기적’이라는 재정지원을 담보로 또 다시 대학의 자율성을 엄청나게 규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자율적 책무성이 강조될 때 비로소

목표하는 연구와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확대

흔히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 교육체계나 개성 없는 대학운영은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지역과의 친화력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특성화가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쉽게들 말한다. 그러나 대학·학문의 특성화란 교육현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학문분야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도 아니며, 오늘 인기 있는 학문분야가 내일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특히 특성화의 성공 여부를 취업률로 인식하는 한 어떤 대학도 취업이 용이한 학과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특성화에서 배제된 학문분야의 육성방안을 함께 검토하지 않는 한, 특성화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갈등 해소를 위한 경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 3) 지방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

지방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지향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육, 경제, 정치, 교통, 문화, 생활환경 등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도 세계적 차원에서는 변두리에 속하게 되므로, 지방으로부터 세계적 문화 중심으로의 직접 진출을 꾀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은 중요할 뿐 아니라 수월성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인재지역 할당제처럼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이겨내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해외 유출 논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4) 기숙사 확충 5) 장학금 확대 6) 우수 교수 유치  
경북대학교의 최근 3년간 입학자료를 분석하면 권역 외 고교출신이 평균 36%에 달한다. 7대 도시 대학의 사

정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건립에는 7대 도시에 한 대학씩만 지원하더라도 건설비만 최소 500억 원이 필요하다. 또한 64%에 달하는 권역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면 국립대학 학비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반액을 계산하더라도, 재학생(956,821명)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최소 8,600억 원에 이른다. 한편 우수한 교수일수록(특별한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 -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바, 매킨지식 경영법을 원용하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교수 유치에는 최소 5,000억 원이 필요하다. 결국 ④, ⑤, ⑥사업에는 주먹구구식 계산법으로도 1조 5,000여 억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제반 사업(특성화, 설비 확충, 교육개혁 우수, 지방대학 특성화, 국립대학 기자재 확충, 그리고 BK21)의 예산액은 모두 합쳐도 4,370억 원에 불과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 7) 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각종 위원회의 설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산·학·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산업체는 의견수렴 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 그들의 *raison d'être*인 이윤추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 교육경비의 부분적 부담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발달한 '기증문화'가 그에 버금가는 세제상의 혜택과 기증자의 뚜렷한 가치철학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정부 내의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대학인의 몫

오늘날 지방대학 위기는 마치 대나무 광주리에서 새는 물과 같이 상하탱석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상 유례 없는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는 금세기에 낙후된 대학의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교육부를 원망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기만을 기다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다. 한달이 늦어지면 1년이, 1년을 망설이면 10년이 뒤쳐지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방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답은 경쟁의 논리나 균형적 배분의 논리로 갑론을박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 주중관계를 전제해 '당

근과 체적의 논리'가 자연스레 회자되는 현실에서 대학인들은 무엇을 해 왔는가? 대학구성원인 우리는 대학의 주인으로,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해결방안도 우리 스스로가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서 전하는 현금의 사건·사고들은 '과연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에 지나친 시장 논리·경쟁논리의 개입을 방임했던 것은 아닌가'를 반성하게 한다. 지금은 교육 전반에 대한 발상의 전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낙후된 대



학의 교육현장에 비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의 전수를 통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사실판단·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한 방안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 나아가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출발은 대학구성원 모두가 '낙후된 대학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대학의 선진화가 가능한가?'를 신중히 생각하고, 얻어진 결론을 실천하기 위한 시작점에 있다. 신중한 고려 끝에 내려질 결론은 틀림 없이 각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리라. 출발 신호는 오래 전에 울렸다. 승리는 먼저 출발하는 자에게 있다.

## 정부의 몫

6월 1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명의로 의약분업에 대한 광고문안이 실렸

다. 안타깝게도 교육의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다양한 부처의 주장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는 아직껏 집한 기억이 없다. 지금은 화상회의로 외국과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는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는가? 왜 광케이블은 광화문 전신국부터 시험해야 하는가? 대도시 집중화 현상 방지, 인적자원의 질 제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책무를 교육부에겐만 부여하는 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

## 민경은

경북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Visiting Scholar(화학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Visiting Scholar(화학공학과), 경북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장, 대학원 고분자공학과장, 산업대학원 고분자공학과 전공주임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북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교수와 기획연구실장에 재직중이고, 교육부 BK21 국제협력사업 분과위원, 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 정책추진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은 "Miscibility of Blends of Tetra-methylbisphenol-A Polycarbonate and Styrene/Methyl-methacrylate Copolymers, Macromolecules(1987)" 외 다수가 있다. 투명성 수지조성물 외 4편으로 특허를 받았고, 「고분자공학원론」의 역서가 있다.